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8조 4차 추경예산 추석이전 처리 합의

여야대표-국회의장, 오찬회동
코로나 재확산 등에 신속대응 한뜻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정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섭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

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압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맞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해수부, 12일 해기사시험… 2975명 응시

거리 1.5m 확보 등 방역관리 만전

해양수산부는 12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0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해수부는 지난 6월에 2416명이 응시한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을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시험은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2975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대본의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 수용 인원도 작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김종인 “개천절 대규모 집회 자제” 호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절체절명의 시기
절제있는 분노, 더 많은 지지 받을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

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2021 어촌뉴딜 300 공모, 236곳 신청… 경쟁률 3.9대1

해수부, 작년 2대1 보다 높아져
전남 72곳, 경남 50곳 등 신청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현황)

/해수부

시·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수	6	12	4	9	29	4	15	72	19	50	16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57개 시·군·구에서 총 236개소를 신청,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 사업 경쟁률(2대 1)과 비교해 확연히 높아진 수준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하였고, 2020년에는 12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당초 50개소(잠정)를 선정

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반영해 60개소(잠정)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최종 선정 지역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2021년도 예산안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현장·우편 접수 대신 어촌어항재생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공모 신청 방식을 변경해 진행했다. 사업에 신청한 11개 광역자치체 중 전라남도가 72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50개소, 여수시와 거제시가 각각 12개소를 신청했다.

해수부는 수산, 어촌, 관광, 건축, 디

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9~10월), 현장평가(10~11월), 종합평가(12월)를 실시해 올해 12월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수부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2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셔서 감사드린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상반기 11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기존인증 기술서 매출 60억 발생
기술 상용화·활성화 효과 나타나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에 신청된 71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총 247건이 신청됐고, 이 중 47개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신기술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는 85%(40건)에 이르고, 대표적인 11개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용화와 시장 진출 활성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추세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탈황 첨가제를 이용한 황산화물 생성 저감 기술’은 선박연료에 고분자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탈황 첨가제를 투입해 황산화물을 흡착·중화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사회적기업 78곳 인증 고용부, 총 근로자 5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2626개, 종사근로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 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이번에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한용수 기자